I ♥ DOKDO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를 지키려는

# 독도소식지 제23호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6년 4월 15일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번길12 부경빌딩201호
TEL:051-3363-114, FAX:051-3363-112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계간23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인업 (051)807-0600

##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 독도소식지 23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년뒤 日국민 대다수 '독도, 일본 땅' 이라 믿을 것"

日서 '독도역사밝히기' 운동…在日독도연구가 박병섭씨

기사입력 2016.03.21 오전 11:42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서 일본인 일반에 침투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할 세력이 마땅치 않다." 한 · 일 관계 및 독도 관련 홈페이지인 '반월성(半月城) 통신'을 운영하는 재일 독도연구가인 박병섭(74 · 사진) 씨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강화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재일 한국인인 박 씨는 도쿄(東京)교육대(현 쓰쿠바(筑波)대) 이학박사 출신으로 가스화학 분석 엔지니어로 30년간 기업에서 일하면서 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위안부, 일본의 전쟁책임, 전후배상 · 보상, 야스쿠니(靖國)신사 문제, 재일한국인 차별과 인권 · 시민권 문제, 한 · 일 역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5년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竹島 ·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제정하자 독도 문제에 집중해 왔다. '독도어업사'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해 지난 1월 한국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하는 제6회 '독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 씨는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교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은 무서운 것"이라며 "앞으로 10~20년 후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믿는 일본 사람이 대다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영토 문제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엄격한 비판을 받을 것이기에 일본 정부는 근거가 없어도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이런 흐름을 저지할 방법에 대해 "역시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밝혀내서 일본인 일반에 침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정부나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고 주일 한국문화원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도 독도 문제는 터부(금기)시하거나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문화일보)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후원금 주신 분

| | | |
|---|---|---|
| 정국민 |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108 | 200,000원 |
| 임지훈 |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로 | 100,000원 |
| 인태정 | 부산시 진구 부암3동 백양쌍용 | 10,000원 |
| 최운경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10,000원 |
| 조인회 | 서울시 성북구 정릉1동 구성A | 10,000원 |
| 김은재 |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 10,000원 |
| 전상훈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10,000원 |
| 김정언 |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 7,000원 |
| 박대윤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 5,000원 |

# 日정부 韓 독도 불법점거' 뺀 교과서에는 수정 지시(종합)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6/03/18 14:09

**독도 고교 교과서 '독도 일본땅'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 교과서에 실린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구분돼 있다.

**검정의견 통해 지적함으로써 수정판에 반영토록 해 지도에만 독도 표시한 출판사, "1905년 日편입" 등 기술 추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8일까지 진행된 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싣지 않은 출판사에는 사실상의 수정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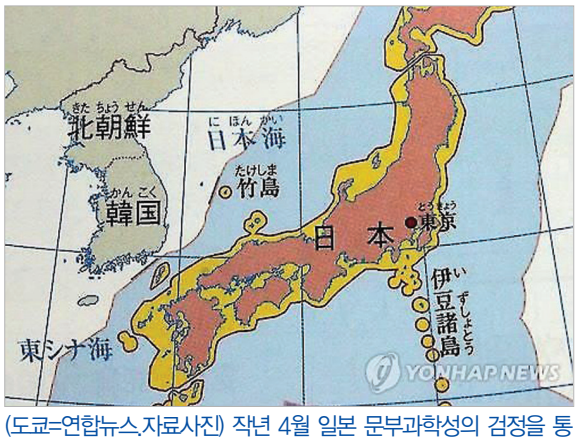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자료에 의하면, 시미즈(淸水) 서원은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애초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島根)현에 속한 다케시마(竹島 · 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현재 상황과 평화적 해결을 향한 우리 나라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 의견을 붙였다. 그 결과 검정을 통과한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1학습사의 '지리 A' 교과서 원문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다"고만 기술돼 있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검정에서 역시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다케시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 의견을 냈다.

**일본 고교 교과서도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 ·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실려 있다.

결국 수정본은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는 한국에 점거되어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로 고쳤다. 문부성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는 검정에서 불합격돼 폐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일본 정부가 '한국의 불법점거' 기술을 출판사에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처럼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하고 치밀한 검정 태도의 영향으로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는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데이코쿠(帝國) 서원의 지리 교과서에는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경비대를 배치하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하는 등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다. 도쿄서적의 지리 교과서도 "일본해(동해) 상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어 일본은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문부성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점도 기재토록 했다.

**일본 고교 교과서도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 ·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실려 있다.

제1학습사는 문부성의 지적에 따라 정치 · 경제 교과서에 "다케시마 영유권의 해결을 향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을 한국에 수차례 제안해왔지만 한국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정본에 추가했다. 제1학습사와 시미즈서원의 현대사회 교과서에도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내용이 검정 신청본에 없었다가 문부성 지적에 따라 추가됐다. 또 이번 검정을 통과한 모든 일본사 교과서(6종)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됐다. 특히 도쿄서적 '일본사A'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지도에만 독도가 표기돼 있었지만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이라는 기술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검정을 통과한 일부 지리 교과서는 "에도(江戶) 시대(1603~1867)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1905년 일본령으로 편입했다"는 등 내용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전후해 한일간에 불거진 외교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의 지도에 독도가 다다케시마(竹島 ·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고 일본 땅으로 구분돼 있다.

hch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18 14:09 송고

# 독도사수연합회는 대한국민이 2월22일 일본 독도 날을 묵인하지 않음을 세계에 알립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일본의 거짓 독도 날 행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묵인을 하지 않고 규탄하는 것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온 국민 참여 합시다.

# 10월25일 독도날 보다는 "독도칙령 날" 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독도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독도로 본적을 이전하고 독도 운동을 하는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입니다. 본적이 독도라 독도 이상훈 이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독도칙령 날" " 독도 날"을 정부가 정한 것은 없습니다. 각 지역이나 각 단체가 독도 날이라고 부른 것이 있고 언론이 독도 날 이라는 기사가 나오니 일반인들이 독도 날을 정부가 정한 걸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에 항의해서 2005년 7월 4일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했다. 독도의 달은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날(자칭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경북도의회가 2005년 7월 4일 조례로 제정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의회가 독도의 달로 제정한 2005년부터 매년 10월에 독도의 달 행사를 하고 있다. 2xxx년에 민간단체인 독도xx대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xxx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해서 독도의 날 청원을 국회에 하였으나 독도NGO포럼(독도단체대표자회의)에서 독도의 날 제정의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려 제정되지 못했다. 독도xx대 주장대로 독도 날을 지정 한다면 아마도 독도 날이15주년 기념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201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 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5주년이 될 것입니다, 독도xx대나 한국교총에서 하자는 독도 날도 고종황제 독도칙령 41호를 근거로 하는 것이지만 "독도칙령 날" "독도 날" 이름자체가 틀립니다. 이름이 틀리는 것을 한다면 일본의 틀린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틀리는 이름을 사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이름 그대로 독도칙령 41호를 사용해서 "독도칙령 날"을 만들면 독도칙령 날 기념식은 자연스럽게 횟수는 115주년 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독도 날이라고 하지만 독도 날 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독도 날 이라고 생각하지만 "독도칙령 날"이라고 하면 독도칙령이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님이 독도관리 하라는 명령한 날인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독도칙령은 대한제국 관보 제 1716호에 칙령41호를 개재하여 서울에 있는 각국 공사들이 볼 수도 있고 가져 갈수 있게 두었는데 일본공사가 아무 항의가 없었든 것은 독도를 대한제국 땅으로 일본이 인정 한 것입니다.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을 주장했던 일본에 대한 반박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도칙령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한다면 국제사회가 볼 때 누가 먼저 선점을 했다고보겠습니까? 당연히 일본보다 100년이 빠른 대한제국이 선점 했다고 볼 것입니다. "독도칙령 날" "독도 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 법으로 선점 한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하려는 것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일을 소위 '독도의 날'로 만들어 국민의 역사의식을 왜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가. (한민족독도사관 관장) 일본은 독도침략 날이 있지만 침략 날을 편입 날 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칙령 날"을 국회에서 법제화 안하고 있지만 칙령을 제정 반포 한 것은 만 천하가 아는 일입니다. 여기 오신 귀빈여러분 그리고 학생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우리 영토 독도입니다. 일반인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일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미디어실에서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회장

##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8편

려해연구소 RYEO HAE INSTITUTE 麗海硏究所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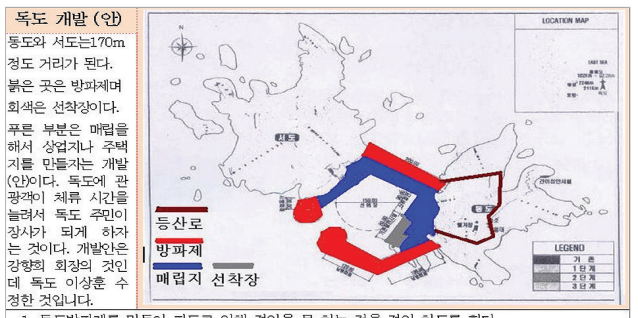
특히 일단 싸우면 모든 지략을 다해서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을 지선(至善)으로 아는 '손자병법'에 익숙한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안목으로 보기에) 허점투성이인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적어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시제법상 일단은 유효한 조약이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허용하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독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법적 입장을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1998년한일어업협정」을 종결시키지 않는 한, 한일간의 역사 인식의 괴리가 해소되지도 않을 것이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일본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일간 역사 인식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실사구시적 과제로써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문제와「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 5. 한일간 역사 인식 괴리를 해소하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기회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침략 행위 책임을 도의적으로 나마 수긍했던 무라야마 담화와 국정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 한때 일본 정부가 채택한 적이 있는 「근린제국조항」들을 실질적으로 백지화하고, 평화 헌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을보이며, 168명이나 되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야수꾸니 신사를 한꺼번에 참배하는 것을 보고 뉴욕 타임스는 "매우 비생산적(counterproductive)이고 무모한(foolhardy) 움직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정부가 61년 전 센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된 4월 28일을 '주권 회복의 날'로 정해서 일본 왕 내외까지 불러 앉혀 놓고 "천황 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정부 공식행사를 갖자, 게이오 대학의 모리히데 가 다야마 교수는, 평화헌법을 고쳐서 무장한 군사대국으로 일본을 일거(一擧)에 변모시키려는 "한낱 싸구려 정치적 속임수"라고 비난하였다. 일본의 이런 극단적인 우경화 움직임은 독도문제를 금방 심각한 위기(crisis)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근원적으로 고쳐서 독도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용기 있는 시도를 해야만 한다. 한국은 아베의 우경화 정책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시하고,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Nationalism을 우려하는 일본 국내 지식층의 분노에 찬 우려를 주시해야만 한다.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도 사태는 금방이라도 중일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중일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않으려는 많은 요인들이 상존한다. 한국은 이런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응집하고 이용하여 미국 및 중국과 연대해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한국은 이 기회에,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조약이 시제법상 일단은 유효한 조약이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허용하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독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법적 입장을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있는「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종결시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철저히 적극적으로 인식시켜야만 한다.

〈다음호에 계속, 본회 홈피에서 전부 볼수 있음〉

## 독도주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자. 안 하면 뺏길 수도 있다.




독도바다도 독도다. 바다가 공동수역이다. 지도상 이름은 일본 이름을 다른 나라는 사용 하고 있다. 뺏기는 중이다. 독도는 우리 땅 온 국민이 주인이다. 독도주인이면서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인가? 지키는 것인가? 최소한 독도사수연합회에 회원이라도 되어서 노력을 하자. 독도를 개발하여 독도마을을 만들어 살 수 있도록 하자. 정부의 정책을 고쳐야 국제재판에도 유리하다. 아래서명용지를 복사하여 서명을 받아 보내주시기 부탁 합니다. 국민들이 서명 많이 하면 여론이 되고 여론이 되면 정책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고치면 유리하다. **독도사수연합회.**

##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 · 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정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 순번 | 성 명 | 주 소 | 서명 | 비고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oinkorea.cafe

보낼곳 47766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7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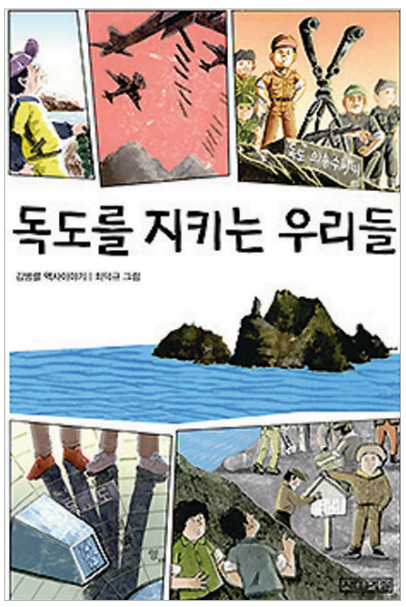
독도사수연합회 E-mail :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독도 이상훈

# "독도는 우리 땅"만 알면 빼앗겨도 할 말 없다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507

[서평] 김병렬 역사이야기, 최덕규 그림
〈독도를 지키는 우리들〉

16.03.25 10:32 최종 업데이트 16.03.25 10:32 조영미(choym)



▲ 〈독도를 지키는 우리들〉 책표지.

독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른이나 아이나 한결같다. "독도는 우리 땅."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분노만 할 뿐이다. 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지, 우리 땅이라고 명확히 하면 안 되는지 등등 더 깊숙이 묻거나 토론을 하려들면 발을 빼기 일쑤다. 식상한 주장에 지친 것인가. 아니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인가. 최근 독도에 관한 뉴스가 나왔다. 일본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사회과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수록했단다. 심지어 일본 고교교과서 27종에 "日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내용도 실렸단다. 일본 초·중학교에 이어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인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가.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지속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의 〈독도를 지키는 우리들〉을 집어 들었다. 막연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 말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 했기에 더 집중해서 읽었다. 우리 아이들은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다행히 〈독도를 지키는 우리들〉 주인공 나리는 독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독도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가 하면, 궁금한 점을 통해 '독도 지킴이'로 나서기까지 한다. 참, 기특하다. 독도는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

(지면 관계상 이만) 본문 위의 주소로 오시면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려 노력 합시다.

# 독도 국제재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른 일이 생기면 어떻게

http://cafe.naver.com/docdoinkorea/4841

서론 일본인 중에 역사 왜곡하는 자들과 극우주의자들이 독도를 뺏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18일 평화선을 선포하고, 10일 만에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니 평화선을 인정 못 한다고 항의를 하면서부터 독도분쟁은 시작된 것이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이니 일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시하면 된다는 정책이다. 즉 조용한 외교라는 것이다. 엄연한 우리 땅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어선도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조업 하면서 일본에게 조업한 양을 중간 중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실이고 세계의 대다수 지도가 다케시마로 표시하며 아시아권의 경제인들의 설문조사와 외국의 역사 학자들도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독도주변에 5천톤급 삼봉호를 상주시키며 경비를 한다. 그러나 독도에 군인을 배치하면 일본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군인을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경찰청장의 주장도 있었다. 일본의 극우파 4명이 독도에 상륙 하려고 오키도 까지 왔는데 일본정부가 막았기에 상륙 하려고 못 온 일도 있었다. 우리국민들은 독도를 빼앗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시민단체 중에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독도가 한국 땅 이란 홍보를 하지만 독도문제가 극에 도달 한다면 국제재판을 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며 국제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독도연구와 유인도화 관광지화 등등 서명운동을 같이 하지는 독도사수연합회의 말에 동의하며 함께 노력하는 독도지킴이는 별로 없다. 우리국민 다수가 방심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국제재판에서 지면 일본이 무력으로 밀고 들어 올 명분이 생긴다. 국제재판은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을 못하는 것이다. 2014년6월10일 뉴스에 일본의 비밀문서 중에 "50년 전 日비밀문서 "독도, ICJ 제소 불가" 라는 제목으로 1962년 일본 외무성은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대상이 안 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기사가 나와서 더욱 국민들이나 정부가 방심을 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국제분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고 독도로 인해서 한.일 간에 전쟁의 위험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유엔이 전쟁을 하도록 두고 볼 것인가? 전쟁을 안 하게 할 방법을 모색하여 평화적으로 해결 하도록 할 것인가? 평화적으로 해결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어느 쪽도 양보를 할 수 없는 독도문제이다. 평화적인 방법은 국제재판 외에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론 일본 시마내현에서 2005년부터 독도의 날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매년 거행한다. 그 행사장에 모인 인파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서 이 추세라면 2030년 독도의 날 행사에는 50만명이 모이고 일본 정부의 요직들과 일본전역의 극우파와 시마내현의 주민 대부분이 참석할 것이다. 행사를 거행하며 한국이 자기네 땅 다게시마를 불법점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일본 정부요직들과 극우파지도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이며 일본은 다케시마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을 극우파 지도층 입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연설하는 놈도 역시 그 말에 양념을 쳐서 할 것이다. 어느 놈은 자기네 땅 다케시마에 가자고 단상에서 핏대를 올리며 말을 하는데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행사는 끝나고 극우파 한 놈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다케시마에 같이 갈 분은 부두로 나갑시다!" 외치니 군중 대다수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모두 "우리 땅 다케시마에 갑시다!" 하며 부두로 몰려 나간다, 부두에는 미리 극우파가 준비한 다케시마호(1만2천톤급) 선박이 준비돼 있었다. 다케시마호에 올라탄 인원은 8백여명 되었다. 한편 일본정부 내각에서는 일본정부는 국제여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못 가게 막느냐? 일본극우파의 환심을 사기위하여 그냥 두느냐? 를 가지고 비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극우정치인들이 미리 각본을 만들어서 착착 진행되는 일이다. 극우정치인들은 차기에 선거를 생각하고 막으면 안 된다는 말로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 한다. 다른 정치인들도 속수무책 일 때 우리의 영토에 우리국민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하며 공격하여 모든 각료들은 애국적인 인사들의 길을 막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정부에도 긴급비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는 회의다. 회의 결과는 경찰함정이 독도 영해에 대기해서 막는 걸로 결정을 했다. 해군에게도 비상대기령이 선포 되었다.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 700명이 우리가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겠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며 선박을 준비 해 달라는 연락을 한다. 한편 국민들은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서 우리경찰함정 삼봉호(5천톤급)에서 일본극우파들이 탄 다케시마호가 보이게 된다. 우리경찰함정에서 다케시마호가 보인다고 상부에 보고를 한다. 상부에서는 다케시마호를 독도영해 내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지시를 한다. 삼봉호 에서는 작은 배가 큰 배를 막으려면 힘이 드니까 승무원 전부가 긴장을 하게 된다. 시간은 흘러서 삼봉호와 다케시마호가 확성기로 직접 연락이 될 만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삼봉호=〉 일본말로 "여기는 대한민국 독도의 근해이다. 독도영해가 가까우니 영해 침범을 조심하라!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는 국제법위반이다!" 다케시마호=〉 한국말로 "무슨 말이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우리는 우리영토 다케시마에 상륙할 것이다. 한국경찰은 길을 비켜라!" 다케시마호가 순순히 물러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장은 급히 상부에 무선으로 보고하고 무기사용을 허락 해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장도 무기사용을 허락하지 못하고 (지면상 다음호에 계속)

본문상단에 주소로 오시면 전부 볼 수 있습니다.

## 독도소식지 23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빼앗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안녕하세요.
나라를 못 지키면 또 다시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시대를 우리역사는 말 해줍니다. 징용제도와 위안부제도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측 가입원서를 보시고 가입 해 주십시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 상 훈**

##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

| |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 | 성별 | |
| 연락처 | 이 메 일 | | | | 사진 |
| | 자택전화 | | | | |
| | 휴대전화 | | | | |
| 주 소 | | | | | |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 도 사 수 연 합 회** 귀 하

우편번호 : 4776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번길 12 부경빌딩 201호
TEL : 051-3363-114, FAX : 051-3363-112,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